

산업장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로… 위기시 4단계 경보 발령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의결 석유·가스공 ‘자원비축 의무기관’ 기본계획·시행계획 5년마다 수립



경북 포항 앞바다 심해에 매장된 약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채취하기 위해 웨스트 카펠라호가 시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 자원안보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평소 핵심자원 비축의 무기관으로 지정되고, 자원안보 위기 발생시 4단계 경보가 발령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작년 2월 6일 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7일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안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구성·운영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이 포함됐다.

우선 자원안보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한다. 국가 자원안보 정책방향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부장관이 맡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또 석유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자원안보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자원안보전담기관

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위기대응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실시하는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는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에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산업부 요청에 따라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을 이행하는 기업·기관 범위를 구체화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은 평소 비축의무기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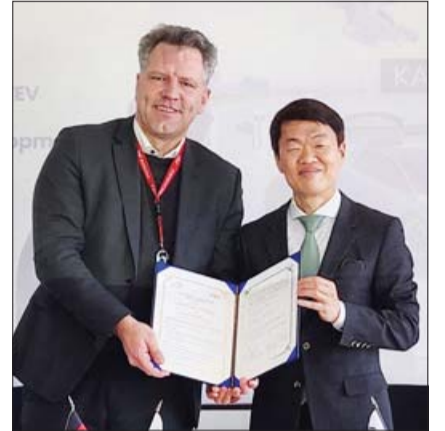
규정하고, 비상시에는 한시적으로 추가·신규 비축의무를 지게 되는 비축의 무기관의 범위, 기관별 비축물량 등은 별도 고시한다.

또 우리나라 핵심자원 자체 조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할 수 있다. 또 해외개발 핵심자원 반입명령, 비축자원 방출·사용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개별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의 발령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했다.

산업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비·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장(오른쪽)과 크리스토프 멘네 FEV 수바장이 지난 13일(현지시각) 독일 아헨 FEV그룹 본사에서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자연

한국자동차연구원 독일 FEV그룹과 맞손 수소 모빌리티 기술개발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이 독일 자동차 엔지니어링 기업 FEV 그룹(사장 패트릭 휴페리치)과 손잡고 친환경 경수소 모빌리티 혁신 기술개발에 나선다.

한자연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나승식 원장과 크리스토프 멘네 FEV 부사장이 독일 아헨에 위치한 EFV 본사에서 ‘수소엔진 시스템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FEV는 1978년 설립한 글로벌 자동차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 독일 아헨 본사를 비롯해 미국,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다.

특히 저배출·저소비 엔진 및 시스템 개발과 에너지 기술의 설계·개발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 기술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안전기준 부적합’ 86개 해외직구 제품 적발·반입 차단

환경부, 올해 안전성 조사 예산 확대 대상제품 1148개→3300개로 늘려

정부가 해외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직구 제품 중 국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까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590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590개 제품은 ▲방향

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257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283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50개로 구성됐다. 이 중 생활화학제품 40개, 금속장신구 38개, 석면함유제품 8개 등 86개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명됐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미용접착제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36ppm 검출됐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접착제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1263ppm 검출됐다. 특히, 테무에서 판매하는 반지에서는 카

드뎀이 국내 기준치보다 800배가 넘는 82.8%였다. 쉬인에서 판매하는 팔찌에서는 납의 함량 기준이 0.009% 미만인데 2.866% 검출됐다.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정보를 초록누리,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소비자24 등에 등록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해외 유통사에 차단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이들 86개 제품이 실제로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도 요청했다. 특

히, 올해에는 안전성 조사 예산을 확대해 조사 대상 제품을 기존 1148개에서 3300개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생활화학제품 2000개, 금속장신구 1200개, 석면함유 우려 제품 100개가 포함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된 위해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해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코트라 ‘수출투자 비상대책반’ 가동

수출상담회 등 상반기 조기 추진 美 트럼프 2기 출범 대비 TF구성



강경성 코트라 사장이 14일 ‘수출투자 비상대책반’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최근 대내외 복합위기 속 불확실성 확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수출투자 비상대책반’을 본격 가동하고, 수출투자 총력 지원사격에 나선다.

코트라는 14일 수출투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출투자 비상대책반은 강경성 코트라 사장이 직접 반장을 맡아 수출투자 확대를 위한 전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 애로 ▲사업집행-예산 ▲통상환경 대응 ▲공급망 모니터링 등 수출투자 확대와 기업 애로해소와 관련이 높은 4개 분과로 구성, 정기회의를 통해 분과별 현안을 점검하고 긴급현안 발생시 수시 협의를 진행한다.

먼저, 현장 애로해소를 위해 대내외

역량을 결집한다. 본사 부서와 84개국 129개 해외무역관, 12개 지방지원본부 등 국내외 모든 접점에서 수출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정부,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할 계획이다.

또 연내 성과창출을 위해 국내외 수출상담회와 해외전시회 참가 등 주요 사업을 상반기 조기 추진하고, 수출바우처 등 필요 예산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검역본부,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선제 대응

환경변화 대응 연구개발 비전 제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4일 ‘제3차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개발사업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대응과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연구개발 비전을 제시했다.

검역본부는 ‘신뢰받는 동식물 질병 연구로 세계적 연구기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동물질병 예방 및 제어기술 고도화 ▲개방형 연구 생태계 구축 ▲미래 환경 변화 대응체계 확립이라는 3대 전략을 내세웠다. 이를 중심으로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선제적 대비 및 대응기술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등 7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이번 중장기계획을 통해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및 고위험 식물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연구를 강화한다. 또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구

현하는 ‘원헬스’(one health) 기반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역학분석 모델 개발을 비롯해 동물복지 및 수의법의학 연구, 그리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진단·치료 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민간 연구개발(R&D)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물안전 연구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체와의 공동 연구를 추진해,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농림축산검역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의 유전자 재조합 소 보툴리눔 백신을 개발해 해외 시장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또 RNA 간섭(RNAi)을 이용한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유전자 치료제를 보급하는 등 국내 농·축산업 보호와 발전에 기여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올해 2만4000명 채용

올해 공기업을 비롯한 전체 공공기관 채용 규모가 2만4000명으로 정해졌다. 국내 공공기관 수는 지난해 대비 20개 감소했으나 정부가 신입직원 선발 규모는 작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청년층의 고용부진을 감안한 방침이라는 게 기획재정부 측 설명이다.

이러한 내용의 ‘2025 공공기관 채용 정보박람회’가 1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김윤상 기재부 제2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주요 지표상으로 양호한 모습에도, 청년층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차관은 14일 “공공기관들이 올해 약 2만4000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목표(2만4000명)와 같은 수치이지만 지정 공공기관 수가 347개에서 327개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여러 공공기관들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씬씬이와 군살을 줄이고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해 핵심업무의 채용역량을 늘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